

# 광주·전남 행정통합 4대 특례 발표…‘슈퍼 지자체’ 기대

파격 재정 지원·서울시 동등 법적 지위·공공기관 이전 우선·산업 활성화 구체적 청사진 통합 급물살…시도, 법적 구속력 갖춘 제도 안착에 총력

광주·전남 지자체와 정치권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일제히 반기며 ‘슈퍼 지자체’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통합 논의의 결집으로 작용했던 실질적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4대 분야 특례를 발표했다.

핵심은 파격적인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법적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배려,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열린 차담회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통 큰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광주와 전남이 단일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통합 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기존 광주시 예산 7조7000억원과 전남도 예산 11조7000억원에 정부 지원금 5조원을 더해 총 예산 규모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국내 세 번째 규모의 재정력을 갖춘 지자체가 탄생함을 의미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시장은 “이번 통합 모델을 이해명 정부의 자치 분권 시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특별시가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인센티브안

### 재정지원

-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추진
- 행정통합교부세(가칭)·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정 지원 확대
- 관계부처 합동·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 세부 방안 확정 예정

### 위상강화

-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로 지역발전 주도 기반 기대

-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및 부단체장 4명으로 확대·직급 차관급으로 격상

-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횡단보직 급 문장

- 지역 특성화영 실·국·도·시·소속 공공원의 개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 개기 마련

### 공공기관 우선 이전

- 산업 발전 시너지 창출 및 주요 기업 추가 유치 가능성 기대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2027년 후반 예상) 통합특별시 지역 우선 고려

- 현재 통합시 내에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일부 이전(관련 법 제정 후 결정)

- 공공기관 창출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생활 인프라 구축 통한 생활 여건 개선 계기 마련

### 산업 활성화

-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 소득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업·제조·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임주기업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 임대료 및 개발 사업지방세 감면 추진

- 특수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개발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우선 경비 추진

### 연예뉴스

- 자료: 국무조정실

김 지사는 통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소멸 위기 지역이 많은 전남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균형발전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에너지 산업과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50MW 발전사업 허가권 등 재생에너지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동부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120만평 규모의 미래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행정통합과 연계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은 “정부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당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과 조직 권한 강화 방안이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광주시장은 이번 통합 지원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는 “소멸 위기 지역이 많은 전남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균형발전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교부세 및 지원금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 구성이 통합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과정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약속 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시도, 내년 2차 공공기관 30여개 유치 목표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 발표  
미래산업 직결 ‘핀셋 유치’ 전략 가동

정부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유인책으로 ‘공공기관 우선 배치’ 카드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유치 경쟁을 넘어 실리를 쟁가는 전략적 공조에 돌입했다. 지역 미래 산업과 직결된 30여 개 기관을 선별해 집중 공략하는 이른바 ‘핀셋 유치’ 전략이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을 발표하며 재정 지원 확대와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다. 핵심은 2027년으로 예정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지역 국회 의원 및 단체장들과의 회동에서 ‘통합 거점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적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합한다’며 통합 지역에 대한 전폭 지원을 시사한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원팀’ 체제를 기동했다. 350여 개에 달하는 수도권의 이전 대상 기관 중 지역 미래 산업과 직결된 30여 곳을 주력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나주 공동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대원칙으로 하되, 광주는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전남은 농생명·해양수산·환경 등 각자의 강점을 살린 ‘핀셋 유치’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양 시도는 특정 기관을 거명하기에 앞서 정부의 정확한 의중 파악과 법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건은 협정 정부가 1차 이전 당시 분류했던 수준으로 2차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 산업은행 이전 사례나 해양수산부 대폭 이전처럼 부처급에 준하는 기관까지 범위를 넓힐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설정하는 ‘판의 크기’에 따라 시도의 요구 사항과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양 시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족집에 특정 공공기관을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정부의 구상을 먼저 듣는 것이 순서”라며 “우선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우선 배치’ 조항을 명문화해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데 집중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뒤 우리가 요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통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적 실효성을 확보한 뒤 정부의 이전 규모에 맞춰 최대치의 실익을 거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이날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지렛대로 삼아 연 매출 3조5000억 원 규모의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역난방공사가 이전하게 되면 장기 간 표류해 온 광주 고형폐기물연료(SRF)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될 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이 지난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협의회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행정통합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320만 시·도민 통합의지 하나로 모은다

### ‘범시도민 협의회’ 출범 본격 활동

광주와 전남 통합과정에서 320만 시·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6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양 시도 교육감 및 지방의회 의원, 시민사회

·경제·학계·노동계 등을 대표하는 위원 500여 명이 집결했다.

협의회는 관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민주적 절차와 폭넓은 공감을 담보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주민자치, 소상공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계각층을 망리한 500명의 위원이 참여해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알리고 지역 내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는 공론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동대표단에는 민기숙 광주주민자치연합회 대표회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

표, 이소현 전남도민원메신저 대표, 박천하 전 목포대 학생회장 등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5명씩 총 10명이 위촉돼 지역 안배와 균형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필수적 생존 전략”이라며 “지역 간의 갈등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통합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양 시도는 발대식을 기점으로 이달 말 ‘행정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지역별·직능별 공동체 등을 주도하며 바탕 민심을 통합의 동력을 승화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자본감소공고**  
주식회사 신화기술은 2026년 1월 14일 주주전원 서면동의로 자본감소의 총액 금 875,000,000원을 금 525,000,000원 감소하여 금 35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의 배정율로 감소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52,500주를 감소하여 35,000주로 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계재 다음날로부터 1월 14일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6년 1월 19일  
주식회사 신화기술  
전라남도 나주시 완사천길 18, 1층(송월동)  
사내이사 이수경

74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